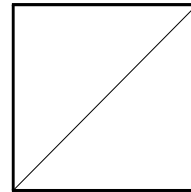


공개



의안번호	제 89 호
의 결 연 월 일	2024. 4. 3. (제 6 차)

의
결
사
항

하나카드(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김 주 현
제출 연월일	2024. 4. 3.

1. 의결주문

하나카드(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하나카드(주)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하나카드(주)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류를 통하여 심사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한 결과, 서비스의 혁신성,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 등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하나카드(주)에 대해 부가조건을 반영하여 지정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별첨】 참조

나. 제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의필(2024.3.26.)

(별지)

하나카드(주)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안

하나카드(주)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다 음 —

1. 상호 : 하나카드(주)

2.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종류, 내용 등 업무 범위

-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인 외화 하나머니 고객이 다른 고객에게 외화 하나머니를 양도하거나, 보유한도를 일시 상향하여 해외 결제시 사용하도록 하는 서비스

3.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 대상

- 실지명의 계좌가 연결된 외화 하나머니 서비스 가입 고객

4.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

- 거주자인 외화 하나머니 고객 간에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인 외화 하나머니를 양도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고객의 신청에 따라 사전에 기간을 정하여 외화 하나머니의 보유한도를 300만원으로 일시 상향하는 서비스 제공

5. 규제특례 대상 금융관련법령

- 「외국환거래규정」 제2-7조의2
-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13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별표3

6. 부가조건

① 거주자 간 거래한도 설정

- 해외여행의 편의성 제고 목적 및 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의 본래 업무범위(재화 및 용역의 구입 대가)를 고려해 제한적 설정
- 양도인 기준 거주자간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1회 1천불 이내, 1일 5천불 이내, 연간 1만불 이내 한정하여 양도를 허용할 것

② 외화 선불충전금 보호 및 환위험 관리

- 고객이 매수하는 외화 선불충전금의 100%에 해당하는 외화를 구매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별도로 예치할 것

③ 거래당사자의 거주성 주기적 확인

- 거래당사자가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경우, 자금 유출입 효과가 발생하므로, 최초 및 전환주기 도래시 거래 前 거래당사자의 거주성을 확인할 것

* 국민인 거주자 2년 이상, 외국인거주자 3개월 이상 외국 체재시 전환(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④ 외환전산망 월별 보고 및 주요 관계기관에 월별 통보

- 거주자간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 거래실적을 외환전산망에 월별 보고할 것
- 증여세 탈세 및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국세청·관세청, 금융정보 분석원(FIU), 금융감독원에 거래실적을 월별 통보할 것

⑤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한도 상향 기간 설정

-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전에 기간을 정하여 보유한도를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상향된 한도는 동 기간에 한해 적용할 것

⑥ 상향된 보유한도의 사용처 제한

- 상향된 보유한도(100만원)는 해외 가맹점에서의 결제에만 사용되도록 할 것

7. 지정일 : 2024. 4. 3.

8. 지정기간 : 서비스개시일로부터 2년

관 계 법 규

□ 외국환거래규정

제2-7조의2(대외지급수단의 발행)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은 다른 전자지급수단이나 주식·채권·파생상품 등 자산 등이 아닌 재화 및 용역 구입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것만 보유할 수 있으며, 타인으로부터 양도받는 것은 보유할 수 없다.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이용한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4. 28.>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대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사용처 및 사용기간 등을 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발행하는 경우: 30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하는 경우: 200만원

②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의 이용한도는 100억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7. 9., 2013. 11. 22.>

③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는 1억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7. 9., 2013. 11. 22.>

④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장치로부터의 현금 출금 최고한도는 1천만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최고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11. 22.>

⑤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이용한도와 제4항 본문에 따른 최고한도의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자금이체의 방법, 이용횟수나 이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9., 2013. 11. 22.>

[대통령령 제30654호(2020. 4. 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1호는 2020년 9월 30일까지 유효함]

□ 전자금융감독규정

<별표 3> 전자지급수단의 세부적 이용한도

가.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 최고한도

(단위 : 만원)

구 분	발행권면 한도	
	무기명식 ¹⁾	기명식 ²⁾
전자화폐	5	200
선불전자지급수단	50	200

1) 실지명의 확인이 없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지 않고 발행된 전자화폐 내지 선불전자지급수단

2) 실지명의로 확인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전자화폐 내지 선불전자지급수단

나. ~ 다. (생략)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융데이터정책과	외환감독국 금융IT안전국
연 락 처	02-2100-2620	02-3145-7920 02-3145-7120